

트럼프 관세 물러서게 한 '채권 자경단'

경제포커스



나지홍
경제부장

“예전엔 환생(還生)이 있다면 대통령이냐 교황, 아니면 (메이저리) 4할 타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모두를 걸출할 수 있으니까.”

1992년 미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일등공신이 된 전략가 제임스 키벌이 남긴 말이다. 1994년 미국발 채권시장 붕괴, 이른바 '채권 대학살(Bond Market Massacre)'을 목격했던 뒤였다.

클린턴 집권 2년 차였던 1994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초 6.2%에서 연말 8.2%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가 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북지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클린턴 정부의 계획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채권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불안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다.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공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 충격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 해 동안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만 1조5000

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가치가 줄어 들었다. 멕시코, 태국, 한국 등으로 이어진 1990년대 신흥국 외환 위기의 도화선이기도 했다.

정부가 과도한 빚을 내면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금리'를 요구한다. 국채 금리는 가계와 기업 대출 금리에도 연동되기 때문에 가계 소비자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 패닉(공황)에 놓인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 확장을 접고 균형 재정으로 선회했다. 연준도 이후 금리 정책을 '깜짝 발표' 대신 사전 예고 방식으로 바꾸

반시장적 정책 좌초시키는 채권시장은 '무정한 심판자' 재정 건전성 계속 나빠지면 한국도 언제든 타깃 될 수 있어

는 계기가 됐다. 채권시장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채권시장이 반(反)시장적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개념이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다. 월가 이코노미스트(경제분석가) 에드 아예네가 만든 용어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나 상식에서 벗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채권 투매로 금리를 끌어올려 징벌에 나선다는 뜻이다. 특정 세력이 아니라 채권시장 자체의 자정 작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경단 공격을 받고 물러난 정치 지도

자도 여럿이다. 2022년 취임한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재원 대책 없는 감세안을 밀어붙이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영국 국채 금리는 폭등했고 파운드화는 폭락했다. 결국 그는 취임 45일 만에 사임했다. 2011년 재정 위기 당시 이탈리아도 국채 투매에 시달렸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물러났다.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전격 유예 방침으로 돌아선 배경에도 자경단이 있다.

그간 한국은 예외였다. 채권 투자자들이 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었고,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경단이 될 만한 세력도, 사냥감도 없던 셈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내년 4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투자 자금은 언제든 자경단으로 변할 수 있는 예비군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국가 채무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한국도 자경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채권시장이라는 '무정한 심판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오직 계산기로 움직이며 손해가 되는 정책엔 가차 없이 채찍을 든다. 국내 금융시장이 자경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시장 신뢰를 받는 재정·통화정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5]

종묘 새 단장... 왕과 왕비 신주 다시 모시네

“신주(神主) 모시듯 하라.” 조심스럽고 정성스레 다루거나 간직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돌아가신분의 영혼이 깃든 신주를 소중하게 모시는 데에서 유래한다. 예로부터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은 세상 떠난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이 만나는 자리로 중요하게 여겼다.

그중 최고의 격식을 갖춘 곳으로, 종묘의 중심 건물인 '종묘 정전(宗廟 正殿)'을 꼽을 수 있다. 조선 왕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자 신전으로 영혼을 위한 공간이다. 왕에게 삶의 공간이던 궁궐과는 사뭇 다르게, 그 혼령을 모신 신주가 종묘의 주인인 셈이다.

신주는 몸을 떠난 혼령이 깃드는 상징적인 물품이다. 왕과 왕비의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었다. 왕이 없고 곁이

좋은 밤나무를 쓴다. 밤나무를 신주로 쓰는 까닭으로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상징과 밤송이가 덮인 밤나무 울(栗)이 두려울 울(懼)도 품어 두려워하며 삼가고 공경하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 정전은 칸을 나뉘어 19개의 실에 19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신실 가장 위쪽 가운데에 신주를 모시고 그 위에 천을 두르듯 놓았다. 신주는 긴 직육면체의 대략 28cm 높이를 간결한 모양이다. 앞면에 묘호와 시호 등을 적고 뒷부분이 볼록 올라와 있는 형태로, '규(窠)'라는 혼구멍을 뚫어 혼이 드나들게 했다.

그동안 종묘 정전이 보수 중이라 창덕궁 옛 선원전에서 신주를 임시로 봉안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 모셨던 신주



를 다시 제자리로 모시는 것을 환안(還安)이라 하는데, 종묘 정전이 새 단장을 끝내 임시 봉안했던 49위 신주의 환안이 시작된다. 20일에는 155년 만에 환안제가 재연된다. 세계유산 종묘에서 열리는 행사는 가히 장관일 듯하다.

신주를 다시 모시는 종묘는 정성 어린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로(神路)를 이어주는 월대 박석들은 잘 정돈되었고, 장엄한 종묘 정전을 감싸는 나무들도 꽃잎 흘날리며 초록빛을 더하면서 반길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이 더없이 엄숙하고 아름답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유원



*영상 QR코드

社 說

美 AI 공급망 생태계에 대만밖에 안 보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4년간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관세전쟁을 벌이자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엔비디아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메모리 업체, 패키징 업체 등이 필요하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이 투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압도적인 수혜 국가는 AI 생태계를 균건하게 형성한 대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수요가 폭발하는 엔비디아의 AI용 GPU(그래픽처리장치) 생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독보적인 공급망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3.9%, 43.5% 늘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도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TSMC만이 아니다. 현재 대만은 AI 반도체를 제조하는 TSMC, 내장형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미디어텍, AI 서버를 생산하는 쿠파 등 관련 기업들이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

아의 젠스 황 CEO는 대만 1위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미디어텍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1997년에 설립된 미디어텍은 과거 삼성전자에 중저가 모뎀칩을 공급하던 회사였는데 20여 년 만에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만큼 기술력이 입증돼 AI 스타 기업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IT 박람회에서 대만 총통이 “과학기술계 모든 사람이 노력해 대만을 AI 혁명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대만 정부의 역할도 컸다. 2021년 '대만 AI 행동 계획 1.0'으로 주요 대학에 AI 연구 센터를 설치했고 2023년 '행동 계획 2.0'으로 매년 AI 연구 인제 600명, 응용 인제 8000명 양성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국가 인재 경쟁력 도약 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4년간 AI 인제 2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중국 AI도 발전하지만 미국 패권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미국 AI 민간 투자는 중국의 10배가 넘는다. 미국 시장이 승부처인데 우리는 우수 인재, 혁신적 스타트업 등 필요 조건에서 다 뒤처지고 있다. 얼마 안 되는 AI 인재조차 해외로 빠져나간다. 스탠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유출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간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AI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스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특성에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협상은 시작되더라도 타협하거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최우선 협상국은 대부분 미국에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이란 뜻이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일본은 구체적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얼른 타협하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 협상 상대국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분르게 대응하다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FTA 등 경제·통상 구조를 바꾸고 국가안보로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6월 3일이면 끝난다.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기는 무리한 일이다. 어차피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새 정부다. 따라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는 새 정부가 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 대행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새 정부는 출범 후 30일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칫하면 이런 국내 정치 논란으로 우리 협상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매듭짓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조건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요구 수준이 어떤지를 충분히 듣고, 국회·주요 정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론을 모은 뒤,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타협하면 된다.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구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질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 대만 문제로 미·일·중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군까지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한다.

일본의 제안이 아니라도 미국은 이미 주한 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불박이 전력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것은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차

라리 그런 경우에 북한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국은 북한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경제력과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다. 재래전만 성장할 경우 미군이 정보 정찰 자산만 제공한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확장 억제란 이름으로 핵우산 제공을 공약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미·중 충돌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이행된다 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주한 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이탈한다면 현재의 핵우산만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0'이 아니다.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 1석2조 ① & ② 위해

김문수·한덕수·나경원 《드림팀》 만들라! 《성남 이재명파》 체압하라!

① 관세협상 성공 모델 ② 이재명 밀어내기 | <대권 당권 분리> 전제로 드라마 연출하라

《제2의 건국》 문 앞에 서있다

《국민의힘 경선》을 어떤 전제로 기초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떤 당위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완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듯 고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만큼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국민의힘만의 행사가 아니라 뜻이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 국민 전체의 명운이 걸린 행사》란 뜻이다. 《제2의 건국》 초입이랄까.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는?

더군다나 6.3 대선에서 자유 국민이 상대해야 할 적(敵)은 예상외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저들은 《민중해방 민중민주주의(NL) 체제 혁명 권》들이다. 그중에서도 일탈이 가장 심하다는 《성남 이재명파》다.

그런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다. 《중공엔 '세계'만 하면 된다 했다. 북에는 《우리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성과가 폄하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 방문 뇌물조로 800만 달러(송금) 혐의로 재판 중이다. UN 결의와 그에 따른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위반 제재 대상》 일보 직전



▲ 이재명과 이재명파의 연동 정책을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세제-'는 친중반미를 떠올리게 한다. 1인당 현금 25만원(13조원 소요) 살도 술수는 배내수알라의 차베스를 생각하게 한다. 입법독재를 통해 사법-행정부-헌재까지 장악해 나가는 술책에 히틀러-푸틴 대자부를 느낀다고 하는 국민도 많다. 《한덕수 / 김문수 / 나경원 드림팀》이 구성되면, 《성남 이재명파》 제압을 희망할 수 있다. © 뉴데일리

이랄 수 있다. 자유인들은 이런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지를 함께 발굴해 내야만 한다.

우리는 특히 《김문수 / 나경원 / 한덕수》 3인을 주목한다. 《한동훈 / 안철수》 등엔 관심이 없다. 그들이 경선 좌절 후, 다른 좋은 선수를 지지하고 협력하길 바랄 뿐이다.

《역전 극장골》을 준비하라

김문수 전 장관은 경선 출마자 중 단연 지지율 1위다. 어떤 조사에선 경선 불참 한덕수 대행이 1위다. 김문수가 《살아온 길, 사상적 노련미, 전체주의에 대한 투지 등》은 어떤 선수들보다도 탁월하다. 《갈백-검소-도덕성-노동 현장 체험-행정적 노하우》에서도 독보적이다.

《경제-통상외교-국제 노하우》에선 한덕수 대행이 단연 돋보인다. 한덕수 선수는 하버드 경제학박사 출신 경제통이다. 《재무-통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관료, 《경제-외교-관세-무역 현장》의 노련한 전문가다.

국힘 경선에서 김문수-나경원이 1, 2위를 한다는 전제 아래 《김문수+한덕수+나경원》 《한덕수+김문수+나경원》 《드림 팀》을 짜는 《파이널 코스》를 기대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당 대표》 등을 놓고서.

한국 자유-보수-우파의 대선 승리를 담보하고 자유대한

민국의 구사일생을 위해 《윤석열의 축복 + 김문수 + 한덕수 + 나경원》 조합은 현재의 조건에선 《최선의 처방》이라 불러 걸고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보내는 시그널

때마침 한국과 미국 사이엔 《관세외교-한국의 핵무장-대중국 디커플링》 문제에서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 많다.

《한덕수 vs. 트럼프 담판》은 《최적(最適)의 맞수》가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회생할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공적 관세협상 모델》을 세계에 만들어 보이고 싶을 것이다. 이재명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고.

렛츠고 투게더!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4월 16일 게재 되었습니다.

